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이 교 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부 도전에 대한 적절한 응전만이 자기생존을 보장한다는 교훈을 우리 민족은 구한말의 비극적인 역사에서 뼈저리게 절감한 바 있다. 모든 나라가 이념을 떠나 부의 축적을 향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 남북한이 10월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시대적 도전에의 적절한 응전이라는 점에서 무척 다행한 일이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는 지루하던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양국은 연내 북한 핵 불능화와 관계정상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

9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 연내에 북한의 “현존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토의하고,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힐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는 8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북핵 불능화가 이루어지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의 임기 내 해결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은 9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평화조약 체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납치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던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도 9월 5~6일 울란바토르에서 열려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일본은 이전보다 유연한 협상자세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이번 달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전체회의와 다음 달 열릴 6자 장관급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고 향후 수년간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재편이 숨가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국면에서 우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주변국의 행보에 뒤처지지 않는 남북관계를 구축해야 함은 자명하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한반도 평화구축 문제이든 남북 번영문제이든 통일문제이든 주변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있어 그들의 협력은 불가결하다.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남북간 협력이 강화되면 4강에 대한 남북한의 협상능력이 증대되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반도 문제의 ‘우리 민족끼리’화를 통

해 민족적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남북이 협력하지 못하고 제각기 독자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이는 민족 스스로의 자결권을 약화시켜 버릴 위험성이 있다. 남북간의 긴밀한 협의만이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현실화할 수 있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 등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개설되었다. 이로 인해 7년 동안 남북관계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향후 수년동안 전개될 질서재편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는 그동안 진행된 실무적 성격의 장관급회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며 조국통일을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 지난 7년동안 우리는 남북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지면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와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김 위원장에 의존하는 북한체제의 속성 탓인데 북한체제가 이러한 속성을 유지하는 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은 자주 열려야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자동적으로 정치·군사 분야로 확산 되지는 않는다. 확산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남북한 정치지도자의 강력한 공동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남북연합이 ‘국가연합’이든 ‘특수한 결합형태’이든 장관급회담을 정점으로 구축되어 있는 남북대화의 제도화를 연합속의 ‘협력기구’ 설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유용하다.

물론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처칠 수상은 하원에서의 연설에서 ‘정상회담’은 여러 수준의 회담 가운데 ‘최고위수준’의 회담일 뿐이라면서 지나친 기대는 금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적어도 정상간에 인간적인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상간의 인간적 신뢰가 상호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간적 신뢰가 있어야 성실하고 진지한 의견교환이 가능한데 인간적인 신뢰는 한 번의 만남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당면의 핵심과제라면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은 인간적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추진할 가치가 충분한 과제이다.